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인 14일 보성 벌교의 들녘이 하늘 및 바다와 어우러지면서 풍성한 황금빛을 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늘어 풍년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보성=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쌀 농사 풍년

올 424만 작년비 5.8% 늘어
전남 생산량은 19%나 증가

기상여건 호조에 힘입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424만톤으로 지난해보다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풍년이 예상된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3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424만톤으로 지난해 400만6000t보다 23만4000t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0년(429만5000t) 이후 가장 많은 양이다.

쌀 생산량은 2009년(491만6000t)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왔으며 지난해에는 400만6000t으로 1980년(355만t) 이후 32년 만에 가장 적은 양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83만3000ha로 전년(84만9000ha) 대비 1.9% 줄었다. 반면, 단위면적(10a) 당 쌀 생산량은 510kg으로 지난해의 473kg보다 37kg(7.8%) 증가했다.

시·도별 쌀 예상생산량은 전남(83만5000t), 충남(81만1000t), 전북(68만8000t) 순으로 많았다. 광주는 2만7000t으로 지난해에 비해 1.1% 증가했다. 전남대비 전남과 전북이 각각 19.2%, 10.6%로 크게 늘어난 반면, 제주와 인천은 각각 19.4%, 8.7%로 줄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육 초기 잦은 비와 일조시간 감소로 포기량 유효이삭 수는 감소했지만 벼 낱알이 익는 등속기(9월 상순~9월 하순)에 기상 호조로 이삭당 완전 낱알 수가 증가하고 낱알이 잘 여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쌀 수급 균형을 이루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수급 균형을 이루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년 가장 비싼 지방선거...재정난 지자체 허리 툰다

사전투표제 도입 등으로 선거 관리비용 급증
광주·전남 821억 부담...2010년 비해 23% ↑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내년에 역대 가장 비싼 지방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에 치러질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소요될 광주·전남지역의 선거 관리비용만 82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선거 관리비용은 광주시와 전남도를 포함 광주·전남지역 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몫으로, 부담액이 사상 처음으로 800억원대에 진입했다. 광주·전남지역 유권자 1명당 약 2만9570원 꼴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선거관리비용 부담까지 점점 커지고 있어 풀뿌리 지방자치의 성공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인물을 선출하는 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주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에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선거관리경비는 총 821억원(광주 225억원·전남 59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2010년에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

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23.1%(154억원) 가량 폭증했다. 광주가 22.6%(51억원) 가량 증가했고, 전남은 17.4%(103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 기준 광주·전남 지역 유권자가 264만5886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명당 평균 2만9570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광주의 경우 유권자 1인당 2만165원을 부담해야 하고, 전남은 유권자 1인당 3만8976원을 부담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도 선거위는 이 같은 내년 지방선거 관리경비를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27개 자치단체들에게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처럼 선거관리비용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비해 증가한 데는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에 따른 투표소 설치 증가와 공정선거지원단 인건비 상승 등 각종 물가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광주는 선거인 수가 7만200여명이

■ 제6회 지방선거 관리비용 (단위:천원)

부담기관	부담액	부담기관	부담액
◆ 광주			
광주시	7,734,299	남구	1,893,303
시교육청	5,074,979	북구	2,428,460
동구	1,213,972	광산	2,069,276
서구	2,119,610		
총계	22,533,899		
◆ 전남			
전남도	17,590,975	도교육청	11,197,263
목포	2,798,737	화순	1,240,733
여수	3,043,077	장흥	886,112
순천	2,289,797	강진	1,251,372
나주	1,434,371	원도	1,038,112
광양	1,437,575	해남	1,449,547
담양	878,924	진도	856,158
장성	1,161,981	영암	1,173,473
곡성	995,603	무안	1,241,864
구례	1,052,786	영광	963,033
고흥	1,492,887	함평	958,243
보성	1,649,605	신안	1,491,289
총계	59,573,517		

자료:광주시·전남도 선거위

더 늘어나고, 투표구 수도 22개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거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시행되면서 애초 하루였던 선거일이 본 투표(6월4일)와 사전투표(5월30~31일)

를 포함해 모두 사흘로 늘어나면서 그 관리경비도 급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관별론 광주에서는 광주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하는 광주시가 77억34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 교육청이 50억7400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구형별로는 북구가 24억28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구 21억1100여만원, 광산구 20억7000여만원 순이었다.

전남에서는 전남도가 175억9000여만원에

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교육청은 112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장·군수와 시·군의원을 함께 뽑을 기초단체에선 여수시가 30억 43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서 지역이 많은 탓이다. 이어 목포시가 28억여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진도군은 8억5000여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 같은 선거관리경비가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은 11월 초 각 지방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직원 급여도 못주는 '국립' 광주과학관

완공 1년만인 오늘 개관
정부 운영비 안줘 '반쪽 운영'

정부와 광주시의 운영비 갈등으로 개관이 지연(광주일보 6월 18일자 1면)됐던 국립 광주과학관이 완공 1년 만인 15일 정식으로 문을 연다.

하지만, 정부에서 운영비 지급을 미루면서 직원들의 급여조차 연체돼 '반쪽 개관'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은철 국립광주과학관장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운영비 등이 없어 직원 월급이 밀리고, 공사대금도 연체되고 있다"면서 "과학관 정식 개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15일 부터 문을 열지만 정상적인 운영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듯하다"고 말했다.

최 관장은 "기획재정부에서는 광주시가 운영비 부담분(40%)을 먼저 내면 국가 부담분을 주겠다고 하고, 광주시는 올 12월 추가경정 예산 때 확보해서 주겠다고 한다"면서 "(기재부에서) 광주시의 (지급약속) 공문을 받아오라고 해 제출했더니, 이번에는 국비가 없다며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기재부의 반응은 같은 공공기관인 광주시를 믿지 못해 국비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극히 이례적인 행정 행태로 받



15일 정식 개관하는 국립광주과학관 전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호남권 자치단체에 대한 지역차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기재부는 광주과학관과 같은 조건으로 개관을 준비중인 대구과학관의 경우 운영비에 직원의 4대 보험료를 포함한 반면 광주과학관 운영비에서는 이를(연간 3억원) 제외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아지는 불이익이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같은 시기에 완공된 동일한 과학관인데 대구는 되고, 광주는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운영비 지급 지연에 따른 부작용은 심각하다. 최 관장은 "운영비 부족으로 지난 6, 7월 분 직원 급여가 연체됐다 8월에 지급됐고, 추세 명절이 긴 9월에도 전체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서 "특히 과학관 공사 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마저 밀려

있어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광주과학관은 직원 급여 등 총 5억원이 연체된 상태로 일부 공과금이 미납되기도 했으며, 최근 신규직원 채용에 참여한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한편, 광주시 북구 오룡동에 있는 국립광주과학관은 844억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완공됐으나, 순수 운영비 부담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정부가 마찰을 빚으면서 1년 동안 개관이 연기됐다. 광주시는 국립시설인 만큼 대전과 과천 국립과학관처럼 정부에서 연간 운영비(32억원)를 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개관 지연에 따른 지역민의 피해를 우려해 지난 6월 지자체가 40%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정부안을 받아들였다.

/박진표기자zacky@kwangju.co.kr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채무는 줄여 주고

희망은 더해 주고

국민행복기금으로 다시 웃으세요!

www.happyfund.or.kr

채무는 확 줄이고 행복은 쪽 올리고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신청자격 :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출자(2013. 2. 28 기준)
- 접수기간 : 2013. 5. 2 ~ 10. 31 (6개월 한시 접수)
- 접수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 및 목포·여수사무소 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전국 농협은행, KB국민은행 지점

국민행복기금 바퀴드림론

- 신청자격 : 연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대출자
- 접수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 및 목포·여수사무소 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개 시중은행 지점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행복기금 을 쳐주세요 ■ 문의 : 시민금융다모아 1397 한국자산관리공사